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추연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9. 5. 29. 제출되어 5. 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주민들로 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병역명문가 지원 사항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9년 5월 현재 2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39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5. 28. 제출되어 5. 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정(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며, 시장이 연 1회 이상 지정함.
- 이용 활성화(안 제5조)
 -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원(안 제7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종량제 봉투 지원 및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사후관리(안 제8조)

-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영업자의 협조사항, 이용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지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권고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금년 5월말 현재 전국 8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690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되었고, 우리시는 64개 업소가 지정되었음.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5. 28. 제출되어 5. 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고,
- 긴급한 법률자문에 대비하여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시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사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중요소송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한 상한액을 삭제하여 주요 소송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긴급한 법률자문의 처리와 시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함. (안 제2조제1항)
- 긴급하고 중요한 자문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자문으로 지정받도록 되어 있었

으나 자문의 시의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간소화함. (안 제4조제6항)

-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폭력, 폭언 등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민사소송·피해구제신청 등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사후 비용지원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 제4호, 제5호)
- 중요 소송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상한액을 삭제하고 이를 대법원 규칙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 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 범위를 규정함. (안 별표 2)

3.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긴급한 법률자문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사후 비용지원을 규정하여 행정의 시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재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여 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고,
- 안 제4조제6항 및 안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를 신설하여 긴급한 법률자문에 대비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시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중요소송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상한액을 삭제하고 대법원 규칙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중요사안에 대한 신속한 자문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시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소송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인근시의 고문변호사 수는 대부분 10명 이내 또는 15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음.

구 분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양	시흥	광명
변호사 수	15명	10명	15명	15명	15명	10명	10명	15명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5. 28. 제출되어 5. 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시행) 제32조 등의 개정으로 ‘장애 등급’ 이 ‘장애 정도’ 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시행) 제38조제4항의 개정예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으로 종전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준 개정(안 제2조)
-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22. 6. 30.까지로 개정(안 제2조)
- 종교단체 의료업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관련조항을 개정(안 제3조)
-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법률 제15270호로 2017년 12월 19일 공포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편사항에 따라 등급구분이 폐

지되어 종전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개정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그간 시각장애(4급)의 경우 전국 공통기준에 따라 지원해 왔고, 이동성 있는 차량에 대한 지원인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된 일몰기한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장애등급 변경사항

기존 1 ~ 3급	기존 4 ~ 6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5. 28. 제출되어 5. 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 9.)’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산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직운영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2조)
- 조직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규정(안 제3조)
- 조직관리위원회의 임기를 규정(안 제4조)
-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중앙-지방의 동반자 관계 확립,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 9. 11.)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으로, 지방자

치 단체 자치 조직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어 안산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시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어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및 기본인력계획 수립, 조직진단,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5. 28. 제출되어 5. 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2019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행안부)」에 따라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총 수 : 2,061명 → 2,131명 (70명 증)
- 집행기관 : 2,031명 → 2,101명 (70명 증)
- 의회사무기구 : 30명 → 30명 (-)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 종류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원	현 행	2,061	1	2,040	3	6	11
	개정안	2,131	1	2,110	3	6	11
증 감		+70	-	+70	-	-	-

- 직급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전문경력관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정원	현 행	2,061	1	1	1	15	110	1,912	1	1	2	6	11
	개정안	2,131	1	1	1	15	110	1,982	1	1	2	6	11
증 감		+70	-	-	-	-	-	+70	-	-	-	-	-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061명에서 2,131명으로 7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관련 순증인원 41명,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항 등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순증인원 29명이며, 종류별 정원은 일반직 70명,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70명을 집행부에 증원하는 것임.
- 또한 2019년도 안산시 기준인건비 총액은 2018년도 총액 188,735,649천원 보다 15,444,997천원 증가한 204,180,646천원으로 소요인건비 추계가 2019년도 총액인건비 인상폭 범위 내에 있어 정원을 조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5. 28. 제출되어 5. 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인구유입 및 출산율 증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 방법 및 대상(안 제3조~제4조)
- 지원 금액 및 절차(안 제5조~제8조)
- 지원 시기, 위탁, 환수 및 지급중지(안 제9조~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여건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안 제1조 및 제2조에 반값등록금에 관한 목적 및 용어 등을 정의하고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의 공제 및 범위 등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신청인, 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원시기를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사업에 대한 위탁과 부당지급의 환수 및 중지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이 본연의 학업에 전념하여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 지역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가 되지 않았으며, 조례제정 공청회시 제시한 지급대상 거주기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동시 수립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5. 28. 제출되어 5. 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 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 칭(안 제2조)
 - 본 회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라 칭함
- 협의회 사업(안 제5조)
 -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
 -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 사업
 -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
 -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
 -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
 -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 협의회 회원(안 제6조)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 임 원(안 제7조)

- 회장 1명, 부회장 2~3명, 감사 2명
-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

○ 총회 및 의결(안 제10조)

- 협의회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단, 정관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정족수(안 제12조)

- 의결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무국의 설치와 조직(안 제14조)

-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

○ 재 원(안 제17조)

- 협의회 경비는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 부담금(회비) 2백만원, 2019 2회추경 반영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음에 따라,
-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함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가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2018년 11월 28일 발족하여,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음.